

길어지는 숏폼 콘텐츠... “창작기회 제공” vs “중독·불법 유발”

국내의 숏폼 주도권 경쟁 치열
유튜브, 쇼츠 60초→3분 개편
티빙·웨이브, 숏폼 투자 확대



숏폼 콘텐츠 시장이 지각변동을 겪는 모습.

/Chat GPT 생성이미지

유튜브가 숏폼 콘텐츠 ‘쇼츠(Shorts)’의 길이를 기존 60초에서 3분으로 연장하면서 ‘숏폼 콘텐츠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콘텐츠 제작 방식은 물론 유통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작권 침해와 중독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 13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15일부터 자사 숏폼 서비스인 쇼츠의 최대 길이를 60초에서 3분으로 늘려 업로드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토트셔만 유튜브 쇼츠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디렉터는 이번 결정에 대해 “크리에이터(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요청한 기능”이라며 “더 길어진 쇼츠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욱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유튜브가 경쟁사인 틱톡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틱톡은 이미 지난 2021년에 숏폼 영상 길이 제한을 60초에서 3분으로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틱톡은 더 복잡한 이야기 구조와 다양한 광고 모델 수익화 등을 도입할 수 있었다고 자평한 바 있다. 현재 인스타그램 ‘릴스’와 네이버 ‘클립’도 최대 90초 이내의 영상을 올릴 수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 4월 기준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전 세계 월간활성사용자(MAU) 수 25억 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은 각각 20억명, 16억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틱톡은 유튜브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유튜브는 이번 개편을 통해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플랫폼 선두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

로 분석된다.

특히 3분으로 길어진 쇼츠는 크리에이터(창작자)에게 더 많은 창작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60초라는 시간제한은 복잡한 주제를 다루거나 깊이 있는 스토리를 전개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숏폼 콘텐츠는 기존 60초라는 시간 안에 짧고 강렬한 몰입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으나 제약이 많았다”라면서 “3분으로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면적인 캐릭터를 구현하거나 다층적인 서사를 쌓아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도 이에 발맞춰 숏폼 드라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티빙과 웨이브는 젊은 시청자들을 겨냥한 숏폼 콘텐츠 제작하고 있으며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 콘텐츠 플랫폼 리더는 최근 숏폼 드라마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며, 스폰랩스는 숏폼 드라마 전용 플랫폼 ‘비글루’를 최근에 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숏폼 콘텐

츠의 사용 시간은 타 콘텐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중독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와이즈앱)에 따르면, 유튜브 사용자는 월평균 41시간 56분을 숏폼 콘텐츠 시청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 사용 시간보다 7배 이상 긴 수치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숏폼 콘텐츠의 빠른 정보 전달 방식이 사용자의 집중력을 저하하고,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저작권 무단 도용으로 인한 ‘불법 콘텐츠의 증가’다. 기존의 60초 쇼츠에서 이미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불법 콘텐츠를 양산하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면서 “영상 길이가 더 늘어나면 음악, 영화, 드라마 등의 저작물을 짧게 편집해 올리는 불법 쇼츠가 더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LG엔솔, 포드 차세대 상용차 배터리 공급

총 109GWh 규모 장기계약 체결
“유럽시장 선도적 지위 공고히 할 것”

LG에너지솔루션이 전 세계 상용차(Commercial Vehicle) 시장 강자 포드(Ford)에 대규모 상용차용 배터리를 공급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와 총 109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 상용차 배터리 셀·모듈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전량 생산될 예정이다.

이번 공급 계약은 지난해 양사가 추진했던 튀르키예 배터리 합작법인 공급 물량과 신규 추가 수주 물량 등이 포함돼 있다. 계약은 총 2건이며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75GWh,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4GWh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양사는 지난해 초 튀르키예 앙카라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JV) 설립을 추진했으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LG에너지솔루션 기존 생산공장에서 물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의 차세대 핵심 상용차 모델에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성공시킴으로써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기상용차는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차량 한 대당 배터리 탑재량이 많고, 평균 운행거리가 길다. 라이프사이클(모델 교체주기) 또한 길고, 눈과 비 등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운행하는 경우가 잦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배터리 공급사를 결정할 때 ‘고출력’ ‘장수명’ 등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 및 기술력을 갖춘 ‘프리미엄 배터리’를 선호한다. 그만큼 평균 단가가 높고 장기 계약도 가능해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

로 각광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통해 자사 제품이 고객의 높은 요구조건을 충족할 만큼 성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전기 상용차 시장 성장은 가파르다. 글로벌 자동차 전문 리서치 업체 LMC 오토모티브(LMC Automotive)에 따르면 유럽 전기 상용차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은 약 36%로, 2030년에는 유럽 상용차 시장 내 전기차 침투율을 5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포드와의 이번 계약은 전기 상용차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높은 기술 경쟁력과 혁신적인 제품 경쟁력을 증명한 사례”라며 “탄탄한 현지 생산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유럽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코스피가 전 거래일(2623.29)보다 10.16포인트(0.39%) 오른 2633.45,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70.26)보다 3.55포인트(0.46%) 상승한 773.81에 거래를 종료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스IS

정치권 “지역특화 상품개발 등 비수도권 가입 대책 필요”

>> 1면 ‘주택연금 가입자...’서 계속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5대 광역시가 2.8%, 8도가 1.3%를 기록했다. 주택연금 해지 시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 주택 가격 상승분보다 많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가격 제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만큼, 이러한 수도권 편중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할 전망이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시내 아파트의 평균 거래 가격은 11억9966만원을 기록했다. 상향 이전에는 서울 시내 아파트로는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가입 기준 상향에 따라 수도권 내의 잠재적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0만명

을 돌파한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지만, 주택연금 가입자는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비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유인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은 고령자 비중이 높아 주택연금의 필요성이 더욱 큰데도 주택연금 가입률이 낮고, 소득 보장도 충분하지 않다”며 “주택금융공사는 지역 특색을 고려한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 편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경총, 기업경영 등 186건 규제개혁 건의

지배회사 계열편입 요건 완화 등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 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분야의 186건의 규제 개혁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장 애로 사항으로는 비대면 택배 수령, 기업활동을 위한 사도 개설 범위 확대, 지구단위계획 전기차충전소 설치 허용 등이 담겼다.

안전 분야에서는 CCTV설치 의무화 및 국산차와 수입차의 이원화 검사 인력 기준 합리화 등 35건을 들었다.

기업경영 부분에서는 공정거래법

형사처벌 완화, 지배회사의 계열편입 요건 완화, 주주총회 서면통지 의무 전자문서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 확대, 관세 보정신청 및 세액 납부기한 완화 등 세제 분야 24건도 포함됐다.

노동 부분은 집회 및 시위 관행 개선, 육상화물운송업 운전자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총은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10개 부처가 관할하는 30개 법령상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해상풍력 발전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연계거리 산정기준 완화 등 환경 분야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백대성 기자 iunm@s